

채상병특검 출범... “진상규명하라”

도의회, “단순 순직 아닌 권력의 민낯 드러낸 중대 사건... 사건 은폐 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서난이 의원(대변인)은 2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채상병 사건은 단순한 순직이 아니라 권력의 민낯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라며 특별검사팀의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 의원은 “국민주권의 위대한 승리를 확인한 ‘빛의 혁명’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단호히 거부한 데서 출발했지만,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난 건 바로 채상병 순직 사건을 통해서였다”며



“권력의 외압과 사건 은폐 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수근 상병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2023년 3월 해병대에 입대해 제1사단 포병여단에 배치되었다. 그해 7월 19일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인은 “국인을 위한 희생”으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실이 ‘격노’

를 이유로 당시 수사 책임자인 박정훈 수사단장의 정당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박 단장을 ‘혁명’ 혐의로 입건하면서 사건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적 반발이 커졌고, 결국 특검이 재추진되어 최근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난이 대변인은 “이번 특검 출범은 국민이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팀은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채상병 순직 2주기가 오는 7월 19일을 앞두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유가족과 함께 군 장병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정의와 진실을 위한 싸움에 도민과 함께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정

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 권력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금화도감 · 멸화군 AI 영상으로 살리다

전북소방, 조선시대 소방 활동 영상 공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선시대 소방 활동을 생생하게 재현한 영상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2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조선 후기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금화도감(金火都監)과 그 소속 조직인 멸화군(滅火軍)의 활약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금화도감은 한양 도심의 화재 예방과 진압을 담당했던 국가 기관이며, 멸화군은 화재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진압 활동을 펼쳤던 전문 인력이다. 영상에는 이들이 기와집에서 발생한 화재를 물통이, 쇠갈고리 등 당시의 도구로 진압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구현됐다.

또한 우리나라에 도입된 최초의 근대식 화재진압장비인 ‘소방완용펌프’도 영상에 등장한다. 인력을 이용해 압력을 만들어 물을 뽑는 방식으로, 근대 소방기술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장비다.

특히 이번 영상 일부에는 2006년 서울 서초동 소방학교에서 진행된 조선시대 궁중 소방대 시범 행사 사진이 활용됐다. 전통 복장을 입은 소방관들이 완용펌프로 소화 시범을 펼치는 모습을 기반으로, 등장인물이 움직이는 형식으로 영상화해 사실감을 더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가정법원’ 설치 적극 홍보

민주 이성운 의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면담 배형원 차장 ‘검토할 단계... 필요성 느껴’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을)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형근 기초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 등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전북지역은 그동안 가사·상속·소년·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도민들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왔다.

이성운 의원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의원실과 법원행정처 실무자 간 논의를 재검점하고,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하면서 법원행정처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시간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주가정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형근 기초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 등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법원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단계”라면서 “가정법원이 분쟁 해결 기능에서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됨에 따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성운 의원은 “전북자치도민 누구

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며 “면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이상동기 범죄 예방 · 범죄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김정수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은 제419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북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범죄 동기와 주요 대상이 불특정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

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응, 교육 및 홍보,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추



진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리상담 및 법률 상담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북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를 명시하고, 필요시 협약 체결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만호 기자

“사법체계, 이젠 바로세워야 할 때”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첫 회의서 사법개혁 의지 천명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지난 7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개혁의 시작을 국민 앞에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이 정상이라 여기는 사법체계를 이제는 바로 세워야 할 때”라며 “법사위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수행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위원장으로서는 격론의 장은 충분히 열렸지만, 무작정 논의만 반복하지는 않겠다”며 “결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기꺼이 행사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날 회의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권력기관의 변화가 많은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17년 전 조선의원 시절과 비교해도 달라진 게 없다”며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사법부와 검찰 등 권력기관은 국민의 심판 속



에 사라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정치권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 문제를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위원장은 끝으로 “앞으로 법사위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를 국민을 위한 정의의 전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접경지역 주민 보호 남북 간 긴장 완화

민주 정동영 의원, 대북전단 사전신고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일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사전신고와 경찰의 현장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경우,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국군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경찰이 금지 조치 또는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동영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고 있기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평화 정책은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살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집시법상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북 전단 관련 규제는 남북 관계발전법에 한정돼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정 의원을 포함해 총 42명의 여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향후 남북관계 관련 법안들과 함께 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